정책 정보

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

- **(주요 내용)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정보통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**
  - **(보호 내용)** 공공, 금융, 통신, 운송, 에너지, 정보통신, 국방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고, 각 부처별로 보호 대책 마련,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
  - **(민간 자율 유도)** 또한 민간 자율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적 침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 「정보 공유, 분석 센터」를 설치하고, 「정보 보호 전문업체 지정 제도」를 추진키로 함

- **(영향) 정보기술 보호의 중요성 인식, 정보 보호 기술 개발 촉진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과잉 규제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있음**
  - 디지털 환경하에서 해킹, 바이러스 등 각종 정보기술에 관한 위협 요소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조성과 함께 민간 기업 측면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
  - e-business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, 향후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임
  - 한편 정보 보호 대상에 공공성이 높은 민간 분야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가능성, 과잉 보호에 따른 국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

- **(과제)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민간과의 협조 체제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함**
  - 정보 보호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보호 범위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 기업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, 관련 주체들간의 합리적인 보호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  - 또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정보 보호 정책은 국가 정보화 인프라 보호와 함께 정보 보호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임

(신광철 연구위원 *kcshin@hri.co.kr* ☎ *3669-4036*)

최근 주요 정책(2000. 7. 3 ~ 7. 17)

수출자동통관제 전면 실시	관세청 (7.14)	- 컴퓨터로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과 연결,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세관심사없이 바로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'수출자동통관제'를 15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함
제조업 금융비용 부담 증가	한국은행 (7.13)	- 1999년 제조업 금융비용부담률은 6.9%로 1997년의 6.4%보다 오히려 높아짐 - 한편 제조업 부채비율은 214.7%(97년 396.3%)로 크게 낮아짐
경제전망 보고서	KDI (7.13)	- 1/4분기 이후 경기상승 속도 둔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, 하반기 성장률 6.4%, 연간 8.6% 예상 - 현행 '신축적 통화정책-긴축적 재정정책'을 점진적으로 '긴축적 통화정책'으로 전환해야 함
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 방향 발표	금융감독 위원회 (7.12)	- 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거나 공정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받고, 독자 생존능력이 없는 은행은 10월에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해 정상화할 방침 -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
부실 건설사 전면 실태조사	건설교통부 (7.12)	-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·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 - 조사대상: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, 공사수주만 하는 위장업체, 건축주 또는 무자격업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업체, 수주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는 업체 등
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영 규모 16조 6천억 계획	건설교통부 (7.9)	- 전용면적 25.7평 이하 서민용 주택 30만 가구 건설과 근로자의 주택 구입·전세자금으로 8조 3,264억원 - 연·기금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8조 1,410억원
부실기업 매각 前 독과점 심사 방침	공정거래 위원회 (7.9)	-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기업 매각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'부실기업 매각 관련 경쟁제한성 사전검토 강화 방안'을 마련, 25개 주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
13세 미만 취업 전면 불허	노동부 (7.9)	- ILO(국제노동기구)의 협약 내용에 반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- 7월 중 취직 인허증의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개정할 계획

주요 정책 정보(2000. 7. 18 ~)

7.20(목)	○(금감원) 자동차 보험료 조정 및 제도 개선안 발표 - 올해 3단계에 걸친 보험료 조정 계획에 따라 8월부터의 책임보험료 인상, 9월부터의 교통 법규 위반 경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 시행 내용 포함